

“한미 비핵화·대북제재 조율 워킹그룹 설치”

미국무부 “FFVD 달성 노력”...비건 대표 방한때 구성 합의 한미 균열설엔 “긴밀 공조”...체계적 소통·협력 체계 구축

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같은 워킹그룹 설치 합의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이번 워킹그룹 구성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취해진 추가 조치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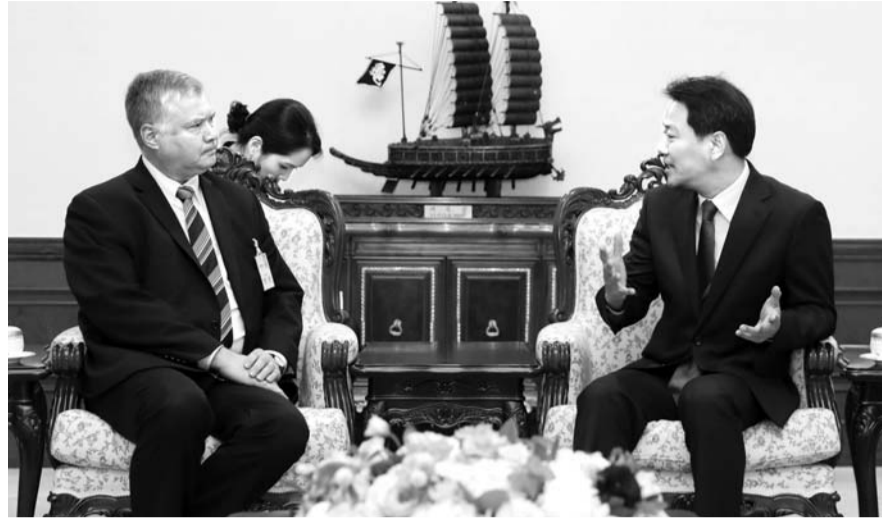
해 “그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 측에서 관련 노력을 이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 내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한미 간 워킹그룹 구성 합의를 놓고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미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설 조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남북 교류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적용 문제를 비롯해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조정 및 조율도 이 워킹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 진전이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미 조야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뛰어넘는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 측은 철도연결 공동조사 등 남북이 합의한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적용,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 등에 대해 우리 측과 온도 차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영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

비건 대표는 이들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양국 간 빈틈없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 간 균열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리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가 비핵화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전시켜온 성공에 있어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긴밀한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이 뉘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제조업 무역전쟁 타격 가시화

성장세 2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커질 듯

중국 제조업 활동의 성장세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미중 무역전쟁 충격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전달의 50.6, 50.8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이달 제조업 PMI는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음을 뜻한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2016년 7월(49.9) 이후 확장세로 돌아서 이달까지 27개월 연속 확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일로로 걷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 활동 확장세는

점차 약화하는 추세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5월 51.9를 기록하고 나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미중 양국이 각각 2000억 달러, 600억 달러 어치의 상대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10월 PMI는 미중 무역전쟁 전면화의 충격이 온전히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함께 발표된 10월 비제조업 PMI 역시 53.9로 전달의 54.9보다 하락했다. 비제조업 PMI는 주로 서비스업 동향을 반영한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달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美 ‘中 기술굴기’ 견제·압박 본격화

“푸젠진화 반도체 제재는 시작”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푸젠진화반도체를 제재한 것은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지속할 공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과 푸젠진화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푸젠진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중국 정부의 3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핵심이었다.

이번 조치로 푸젠진화가 다는 미국 업체들로부터 부품 설계와 제조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것이라 게 일반적 관측이다. 기술 전문가들은 푸젠진화와 중국 정

부의 반도체 야망이 이번 조치로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리서치의 마크 뉴먼은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야심에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먼은 푸젠진화가 애플사이드 머티리얼, 램리서치, KLA-텐코 등 미국 기업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되풀이될 새로운 공세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 투자는행 나티시에서 중국을 주로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카르시아 헤레로는 “미국이 다는 중국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첨단기술이

라면 모든 곳으로 이번과 같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中, 내달부터 6개월간 백두산 입산료 면제

중국이 다음달부터 6개월간 관광객들로부터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 입산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중국 인민망 등은 31일 창바이산여유국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백두산 서쪽과 북쪽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1인당 입산료 105위안(약 1만7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입산료 면제 조치는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간 보고된 ‘주요 국유 관광구

역 입장료 인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창바이산여유국은 지난 5월부터 입산권 1장으로 3일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백두산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출과 일몰, 밤하늘을 감상하는 등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올해 5월 이후 백두산을 찾은 관광객은 210만여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 담배 개비마다

발암 경고 문구 표시 추진

캐나다 정부가 담배의 발암 경고 표시 강화를 위해 개비마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TV에 따르면 보건부는 담배 각 개비에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제조업체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문 절차에 착수했다.

시행되면 세계 최초로 될 이 경고 방식은 ‘담배는 암을 유발한다’는 문구를 담배 둘레에 직접 인쇄해 표시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방송이 전했다.

현행 방식은 담배 겹포장이나 내부에 시각 그래픽과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정부 검토 문건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담배 같은 유해 제품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이 이용자에 매력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캐나다 암협회 로브 케닝햄 수석 연구원은 이 방안에 대해 건강 유해 경고 방식은 ‘논리적인 다음 단계’의 제안이 될 수 있다며 “모든 흡연자에 매년 효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기업들 ‘징용배상 판결’ 한일 정부 대응 촉각

자산압류가능성 등 주목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징용소송의 피고 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한일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무역 상대국이지만 한국 진출, 신규 투자를 자제하는 등 한일 경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와 달리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거나 자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전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일제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오른쪽)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측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이번 판결이 소송을 당한 상태라더라도 법원이나 지점을 둔 일본 기업은 이달 현재 3100여개사로,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8억4000만달러(약 2조933억원)였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선 약 70곳의 일본 기업이 소송을 당한 상태라며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3층
 - ✓ 사무실 전용, 20층중 3층, 하천방향
 - ✓ 전체 을수리, 대형주차장, 주차2대 무료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500만원
- (보500만원, 월세50만원 임대가능)

문의. 010-6834-7400